

“북 핵보유 인정시 한일 핵무장 할수도”

디트라니 미국 전 대북특사 “북한 핵무기 40~60개 보유” 한반도 확실한 비핵화 주문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보유 결정을 이끌 수도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카디르 칸의 사망은 한 개인이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에 핵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적절한 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칸은 자

국에서는 파키스탄을 최초의 핵보유 이슬람 국가로 만든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미국 등 서방에선 핵기술을 북한과 리비아, 이란 등에 팔아넘긴 악당으로 취급받는 등 국내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물이다.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역임했던 디트라니 전 특사는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합법국가 인정과 미국·영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추진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그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40~60개를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비록 북한은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이 과거 시리아 알 카바르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고 알카에다 역시 핵 물질을 북한에서 얻으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이란도 핵무기 보유를 계속 추진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터키 등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디트라니의 진단이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기 원한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메운 마라톤 인파. 위드 코로나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제45회 파리마라톤 참가자들이 프랑스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르몽드 “높은 가계부채·자살... 오징어게임, 한국사회 이면 투영”

“젊은 층 빛 내서 가상화폐 투자”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한국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자리 잡은 한국 사회의 병폐를 조명했다. 르몽드는 17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게재한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소개했다. 상금 456억원을 타겟하며 456명이 목숨을 걸고 펼쳐지는 생존 게임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르몽드의 분석이다. 르몽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웃돌고 있으며, 2014~2018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00여명 중 다수가 빛에 쫓겨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젊은 층은 빚을 내가며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빠져들고 있다는 실상도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지적했다.

다. 르몽드는 아울러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오징어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50억 게임’이 유행인 것 같다”고 비유한 것을 언급했다. 또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득표를 50% 이상으로 당선되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허경영 게임’을 제안한 것도 사례로 들었다. /연합뉴스

프랑스 이어 영국도 원전에 다시 눈길

“에너지 안보 강화·일자리 창출”

영국이 ‘탄소 중립’(net zero, 넷 제로) 전략의 일환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수년 내에 최소 한 건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와시 쿼텡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초 원전 신규 투자 계획이 담긴 탄소 중립 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보리스 존슨 총리가 22일 해당 보고서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넷 제로 전략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이날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정에너지 생산

을 통해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78%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집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약 1조4000억 원)를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꼽았다. 차세대 원전인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300MW 이하 출력을 내는 소형 원전이다. ‘전통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영국과 프랑스가 눈을 돌리는 것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가 안보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에서 난방·발전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반을 전 러시아는 이를 고리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유럽에 대한 공급량을 제한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환경 노벨상’ 어스샷 5개 부문 수상자 결정

코스타리카·인도 기업 등 수상

지구가 처한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윌리엄 왕세손이 장성한 환경 분야의 상 ‘어스샷’(Earthshot)의 초대 수상자가 가려졌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알렉산드라궁에서 열린 제1회 시상식에서는 5개 부문으로 구분한 환경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해법을 제시한 기업, 도시, 국가 등이 발표됐다. 자연보호 및 회복 부문 수상자로는 한때 대부분 산림을 개간했지만, 지금은 수목이 두 배 늘어난 코스타리카가 선정됐다. 코스타리카가 선보인 프로젝트는 열대우림 부활로 이어진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민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롤모델로 평가됐다. 대기 개선 부문에서는 농민들이 농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밭을 태우는 대신 이를 활용해 비료

로 만들 수 있도록 휴대용 기계를 만든 인도 기업이 상을 받았다. 대양 복원 부문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하마지역 산호초를 되살리기 위해 직접 개발한 특수 탱크를 활용한 2명의 절친한 친구가 상을 탔다. 쓰레기 없는 세상 구축 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음식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탈리아 밀라노시(市)가 뽑혔다. 기후 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음이온 교환막(AEM) 방식의 수전해 기술이 받았다. 부문별 수상자는 각각 100만 파운드(한화 16억여 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상식에 참석한 윌리엄 왕세손은 “앞으로의 10년은 지구에 결정적인 10년이 될 것”이라며 “10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도 인류는 해결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부’ 본향 시칠리아, 카톨릭 대부 지명 금지

대부모 제도의 세속화에 경고

영화 ‘대부’(1972)의 촬영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한 가톨릭 교구에서 세례식 때 대부, 대모를 지명하는 교회의 전통을 3년간 금지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신앙적 유대감 강화가 아닌 세속적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범죄 조직의 결속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모 지명을 금지한 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칠리아주 카타니아 교구다. 실제로 최근 이 교구 내 성당에서는 세례식이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열렸지만, 대부모 지명은 없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교구 관계자들은 대부모 지명이 오랜 세월 이어진 전통이고 한때는 아이의 신앙 교육에 필수적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의미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대부모 지명이 세례식에서 ‘금목걸이’를 선물로 받기 위한 허례나 사회적 인맥을 넓히려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에서 힘깨나 쓰는 지역 유지들은 대자녀 수시 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카타니아 교구의 살바토레 젠키 부주교는 이런 조치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말했다. 15명의 대자녀를 두고 있는 그는 “대부모로서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이 교구의 다른 99%는 그렇지 못하다”고 털어놴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